

정치권 속 빼담은 농민대통령

전국 조합장선거 D-9
불·탈법 선거운동 기승
경찰, 수사상황실 설치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에서 조합원들에게 돈봉지를 건넨 후보가 구속기소되는 등 각종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3일 열리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말까지 총 2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298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금품 살포 등 혐의가 무거운 3명은 구속했다.

또 255명은 계속 수사중이며 33명은 내사를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202명(6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선거운동 방법 위반 62명(21%), 흑색선전 27명(9%) 등 순이다.

광주 광산구 모 축협 조합장 후보는 지난달 중순 조합원과 그 가족 등 12명에게 650만원을 전달하고, 또 다른 조합원 1명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넨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후보가 5만원권 지폐를 10장씩 말아 고무줄로 묶은 뒤 악수하는 방식으로 4명에게 200만원을 건넸다는 제보를 받고 이 사실을 검찰에 알렸다.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후보가 조합 대의원 등에게 추가로 돈을 건넨 사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시민들이 목포 근대역사관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오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홍보하고 있다.

이 확인됐다.

검찰은 A씨에게 돈을 받거나 증여의사 표시를 받은 13명 중 뇌물 혐의를 제외한 4명은 처벌하지 않았으며 수사 시작 직후 자수한 3명은 소액의 벌금을,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자수 의사를 밝힌 6명은 최고 300만원의 벌금 처분을 했다.

광주시선관위는 최초 제보자 4명에게 각각 2천만~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다른 9명은 금품수수 사실을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전남에서는 모 농협 지점장이 선거에 출마하는 현 조합장을

비방하는 편지를 조합원 323명에게 보내 물의를 일으키는 등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탈법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후보등록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전국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선거사범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은 선거 공정성을 크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불법·혼탁 양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거일까지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선거일 이후에도 끝까지 수사에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금품을 받은 사람은 선관위가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박은진 기자 pej269400@

광주 보육대란 현실화하나

상당수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동참 조짐
교육청, 긴급돌봄 지원 등 대책마련 분주

광주 상당수 사립유치원이 집단 개학연기에 동참할 조짐을 보여 새 학기 보육대란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개학일을 하루 앞둔 시점까지 유치원 개학 여부를 알 수 없는 부모들은 예가 타들어 가는 상황이다.

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광주에서 개학연기를 결정한 유치원은 1곳(LCI 수완유치원), 교육청 현황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유치원은 59곳이다.

전체 159개 유치원 가운데 37.7%가 개학을 연기했거나 여지를 둔 셈이다.

더욱이 전날 열린 한유총 광주지회 총회에서는 107개 유치원(9곳은 위임)이 참여한 투표에서 102곳(95.3%)이 개학연기에 찬성했다고 광주지회는 전했다.

무응답 유치원뿐 아니라 기존에 정상적으로 개학하겠다고 밝힌 유치원도 대거 방침을 바꿔 개학을 연기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일부 원장은 주변 유치원 또는 한유총 동향을 살피느라 결정을 주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으로 개학은 하지 않더라도 자율 등원 형태로 유치원에 가는 원아에게 돌

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원장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월요일부터 자녀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없는 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학부모 김모씨는 "교육청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은 무응답 유치원으로 분류돼 있는데 내일 아침 아이를 보내라는 말이나, 보내지 말라는 말이나"며 "사립유치원 측 주장이 옳으나 그르냐를 떠나 아이들을 볼모로 한 집단 행동은 절대 공감받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시교육청은 관내 유치원들에 다시 한 번 전체 공지를 통해 개학연기 여부를 묻기로 했지만, 한유총 광주지회 차원에서 방침이 나오기 전에는 상당수 유치원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유아특수교육과에 상황실(062-380-3283~7)을 설치하고, 긴급 돌봄 서비스를 지원에 나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단설 유치원,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개학연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 여성가족부 아이 돌봄 서비스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승현 기자

김정은 위원장 귀국길...중국, 통제 대폭 강화

중국 당국이 베트남 방문을 마치고 전용 열차로 중국을 통과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보호를 위해 통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3일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

은 최근 김 위원장의 중국 경유 당시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귀국길에는 김 위원장 전용 열차를 위한 최고 수준의 통제를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4차례

방종을 했으나 관영 매체의 공식 보도가 나오기까지 그의 얼굴이 언론 매체에 노출된 적은 없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김 위원장이 전날 오후 베트남 동당역을 출발해 접경인

중국의 핑샹을 통과할 것을 대비해 인근 난닝과 핑샹을 잇는 도로에서 검문검색을 강화해 일부 외신 기자를 구류 또는 격리했다.

김 위원장의 열차 통과가 보이는 단둥 중렌호텔의 예약을 5일까지 중단시킬 정도로 사전 통제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연합뉴스

24시 굿모닝

보석불가마 사우나

혈액순환촉진
각종노폐물배출!

첨단중앙로152번길 31

☎ 0507-1662-2207